

1) 제31회 제국의회 중의원 예산위원 제2분과(내무성 소관)
회의록(속기) 제3회

1914년 2월 2일 오후 0시 55분 개의

출석위원은 다음과 같다.

우에바 하카루(植場平) 의원 훗코 젠사쿠(法橋善策) 의원
미타니 노리히데(三谷軌秀) 의원 하마모토 요시아키(浜本義顕) 의원
도모에다 우메지로(友枝梅次郎) 의원
기노시타 시게타로(木下成太郎) 의원
아사바 시즈카(浅羽靖) 의원 사쿠라이 군노스케(柵瀬軍之佐) 의원
고야마 다니조(小山谷蔵) 의원 구보 쓰유(久保通猷) 의원
가나오 료곤(金尾稷巖) 의원
兼務
사사키 분이치(佐々木文一) 의원
와타나베 구니시게(渡辺国重) 의원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 의원
고바야시 겐조(小林源蔵) 의원 가토 가쓰야(加藤勝弥) 의원
가이노 고쥬(改野耕三) 의원

출석 국무대신은 다음과 같다

내각총리대신 백작 야마모토 곤베(山本権兵衛)
내무대신 하라 다카시(原敬)

출석 정부위원은 다음과 같다.

내무차관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
내무성 신사국장 이노우에 유이치(井上友一)
내무성 지방국장 고바시 이치타(小橋一太)
내무성 경보국장 오카 기시치로(岡喜七郎)
내무성 토목국장 구보타 기요치카(久保田政周)
내무성 위생국장 스기야마 시고로(杉山四五郎)
내무성 기감 공학박사 오키노 다다오(沖野忠雄)
조선총독부 철도국장관 오야 곤페이(大屋権平)
조선총독부 탁지부장관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대만총독부 재무국장 나카가와 도모지로(中川友次郎)
북해도청 장관 나카무라 준쿠로(中村純九郎)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다음과 같다.

1914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내무성소관)

○주사(우에바 하카루, 植場平)

개회합니다. 오늘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조선의 세입, 세출, 경상·임시비를 일괄해서 대체적인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가나오 료곤(金尾稷巖) 의원

저는 대체적인 조선 문제에 대해서 총리대신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리대신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동감이라고 소리치는 자가 있었다)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 의원

이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조선에 희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의 정부위원은 아라이 위원과 철도국장이 있습니다. 아라이 위원은 탁지부장관이기 때문에 탁지부의 일은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척식개발은 아라이 위원이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라이 위원의 답변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각자 책임 있는 관리가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도 민정장관이 나오고 있고, 관동주에서도 민정장관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에서 상당한 직책이 있는 자, 민정장관이라든지 데라우치 총독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경무총장 아카시 위원도 나와 있습니다. 정부도 상당한 설명이 가능한 사람을 출석시키도록 분과의 희망으로서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라이 위원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들어도 우리가 만족할 리가 없습니다. 총리대신도 좋지만 총리대신도 역시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 그러한 일은 좋지 않습니다. 이전 데라우치 장군이 육군대신으로 조선총독을 겸임하고 육군대신으로서 출석해서 조선총독의 직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지만, 상당한 직책이 있는 인사를 희망합니다.

○가나오 료곤(金尾稷巖) 의원

오가와 의원의 주장에 찬성합니다만, 아울러 총리대신의 출석을 바랍니다.

○주사(우에바 하카루, 植場平)

그렇다면 총리출석에는 이의가 없으니 먼저 총리대신에게 출석을 통지하겠습니다. 그때 지금의 요구를 교섭하기로 하겠습니다.

○훗쿄 젠사쿠(法橋善策) 의원

지금 오가와 의원의 주장에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조속히 교섭해서 진척시키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구보 쓰유(久保通猷) 의원

총리대신이 출석하신다면 모두 이의가 없으니 주사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사(우에바 하카루, 植場平)

제가 총리대신께서 출석하시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리대신이 출석할 때까지 이대로 하겠습니다.

○훗쿄 켄사쿠(法橋善策) 의원

그 전에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특별회계의 조선 부분을 보면 세입이 증가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조선의 실황도 매우 발달하여 우리들로서는 아주 기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조선방면 신문지상의 보도, 그 밖의 여러 방면에서 조세 증가에 대해서 격렬한 반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실황이 어떠한지, 이로 인해 조선 장래 발전에 저해되는 점은 없는지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지금 훗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조선에서 이번에 증세를 필요로 하게 된 이유, 이것은 조선에서 종래 재정상 취해왔던 방침을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길어지겠지만 들어 주십시오.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당시부터 조선 재정을 특별회계로 한 취지는 매년 제국의회에서도 질문하신 대로 조만간 조선 재정을 독립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극력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래 조선 재정을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조선의 민도 즉 인민의 부를 증식시켜야 합니다. 그 취지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세금은 일본 영토가 되기 전부터 근본적으로 개정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세금은 우선 징수방법을 개정하고자 여러 세법을 시행해 봤는데, 징세 방법이 불안정하고, 구래의 하청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국가에 들어오는 것은 그 반액에 미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군수 등의 손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떤 세법으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징세방법을 개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하청제도를 폐지하고 일본의 현행 제도와 같은 제도를 채용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모두 국고로 거두어들임으로써 중간에서 유용되는 것을 막도록 우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구한국 시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동시에 구 제실(帝室)에서 세금을 다루었습니다. 국고로 거둔 후에 제실이 여러 잡다한 명목으로 취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고의 큰 수입이 되는 역둔도(驛屯賭) 수입은 제실의 수입이었습니다. 게다가 관세 수입도 「브라운」이라는 총 세무사의 관할 하에 특별회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것을 국고로 통일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관세의 특별회계도 폐지하고 제실의 모든 재산과 역둔도 수입도 국고에 편입시켰습니다. 제실 광산도 국고에 편입시켰고, 동시에 모든 세금을 통일해서 이로써 재정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방법을 개정하고, 다음으로 세금의 통일을 도모해서 그것이 완비되면 그 후에 세금의 근본에 손을 대자는 것이 당시부터의 재정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근본은 어찌 되었나 하면, 구 조선시대 시행한 대로 하고 거기에는 지금까지 세금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배와 술에 가벼운 세금을 약간 부과하였고, 모든 세금은 舊稅法에 따랐으며, 조금도 세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습니. 그래서 병합이 되고 나서 매년 모국으로부터 1,235만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행정정리로 1,235만원 중 235만원이 감액되어 올해처럼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생각으로는 언제까지

모국의 보조를 받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 조선의 재정정리 흐름에 따라 조선의 재정은 증세를 통해 독립시켜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취지로 모든 사업을 진행시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온갖 수단을 취해서 산업, 기타의 발달을 장려하였으며, 철도를 가설하고 항만을 설비하고, 모든 교통기관 기타에 대해 계획하였습니다. 동시에 조선의 이출세를 폐지해서 모국에의 이출 편의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곡의 내지 이입세가 폐지되어 조선 곡가가 갑자기 등귀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조선개발에 진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날 조선의 민도는 병합 전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발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다소 부담을 늘리더라도 결코 민도의 발달에 폐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것을 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국으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 모국이 조선을 위해서 힘쓴 것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조선의 경제계가 양호하게 흘러가는 이상, 조선에서도 상당한 수단으로 그 의무를 다하여 모국을 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것을 심한 중세(重稅)라거나 하는 식으로 말한다면, 물론 논의는 있겠습니다만, 매우 경미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지금까지는 착수하지 않아 매우 가벼웠으므로 오늘 날 다소의 부담을 늘리더라도 결코 이 때문에 조선의 발달에 방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금년 처음으로 계획해서 앞으로 5개년 동안 모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보충금을 점차 줄여서 5개년 후에는 독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체의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 숫자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보 쓰유(久保通猷) 의원

지금의 설명에 의하면…….

○주사(우에바 하카루, 植場平)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총리대신과 교섭했는데 자리를 비우시지 못한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구보 쓰유(久保通猷) 의원

조선에서 3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은 종래의 징수 수속을 바꾼 결과 늘어났다고 이해해도 좋습니까?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제가 말씀드린 종래의 징수 수속을 바꾸었다는 것은 구 한국정부시대의 징수 수속을 바꾼 것으로 금일의 300만 원은 세율을 늘린 결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보 쓰유(久保通猷) 의원

그렇다면 내년부터 세율을 올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 세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종래의 지세에 대해 일반 시가지를 제외한 다른 전답은 약 4할 정도 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보 쓰유(久保通猷) 의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한 마디 해두고 싶은 것은 지금 설명하신 제실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이왕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 매우 유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조선당국이 이왕가를 제실이라고 보는 생각이 있다면 조선의 통치 상 적지 않은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하여 저는 의견으로서 한 말씀 해 두겠습니다.

한편 평양광업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평양탄이라는 무연탄이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것을 채굴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일반 인민의 업무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무연탄 채굴을 정부가 일부러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특별히 관업으로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앞에서 주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구 조선정부 시대를 이야기했던 것으로 지금은 물론 이왕가입니다. 구 조선정부 시대에는 제실소유, 국유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실소유라고 말씀드렸다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양의 무연탄. 이 무연탄은 구한국시대부터 채굴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연탄을 채굴할 때에는 좀처럼 민간에서 경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초 무연탄을 채굴할 때에, 물론 민간의 수지로 메운다는 계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관업으로 하였습니다. 오늘 날의 상태를 말하면, 평양광업소에서 나오는 무연탄은 약 11만 톤입니다. 그 11만 톤 중, 약 9만 톤 남짓, 즉 10만 톤 정도는 내지의 해군용으로 매도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민간에 팔렸습니다. 해군의 수용을 제외하면 무연탄이 일반 민간에서 수요할 정도는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 이 사업을 이양하는 것은 수지가 내지의 다른 탄업(炭業)처럼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모에다 우메지로(友枝梅次郎) 의원

아까 하신 말씀에 따르면 조선 재정이 5년 후에는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역시 매년 여러 방면에서 증세를 도모한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조선 세입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5개년 후에 독립을 도모해도 세금을 매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 증세한 것은 지세와 담배이고, 이것과 동반하여 술 소비세를 신설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올해는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중에 술 소비세를 담배와 마찬가지로 과세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모에다 우메지로(友枝梅次郎) 의원

매년의 增收는 병합 이래 어떤 비율로 하고 있습니까? 또 묻고 싶은 것은 총독과 정무총감도 이쪽에 나오신 것 같은데 총독부 요구를 보면 총독의 교제비가 1만 5천 원, 그리고 연회비가 3만 얼마, 기밀비 20만원, 그리고 경찰 기밀비가 5만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시세(時勢)로서는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총독이나 정무총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사(우에바 하카루, 植場平)

도모에다 의원은 아라이 위원에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까?

○도모에다 우메지로(友枝梅次郎) 의원

보류하겠습니다만 아라이 위원의 답변도 일단 듣고 싶습니다.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교제비와 연회비, 이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교제비는 글자 그대로 교제비이고 연회비는 공식 연회로 3대절(四方拜·紀元節·天長節 역자)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지금 상황에서는 연회비는 어쩌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기밀비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조선의 지금 상황에서 이것만은 꼭 필요합니다.

○도모에다 우메지로(友枝梅次郎) 의원

저의 질문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지금 시세로서 조선에 연회비를 두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지금의 질문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조선의 지금 시세로서는 그러한 연회가 필요 없다는 의견입니까?

○도모에다 우메지로(友枝梅次郎) 의원

그렇습니다. 한편으론 증세까지 해서 연회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조선의 현재 상황에서 당국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新附의 민을 다스리는 데 공식 연회를 하는 것은 아주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보 쓰유(久保通猷) 의원

방금 아라이 정부위원은 평양광업소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 이양해도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산에서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경비는 78만 9551원이고 수입은 94만 2087원으로 15만 2536원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이래도 아직 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해군성 연탄소의 석탄 공급에 대해서도 해군성은 자기 소유의 탄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의 향리에 해군성이 소유하고 있는 무연탄갱이 있습니다. 저의 현(縣)에서도 연탄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탄소와 탄갱이 14, 5리 정도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채탄도 해군성은 직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숙련된 탄광업자에게 청부시켜 채탄하고 있습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평양광업소가 수입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조선 재정을 감안해서 다른 전매사업과 동일한 경영 하에 평양광업소를 경영해 간다는 답변이라면 또 다른 생각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15만 2천이라는 이익을 우리들의 눈앞에 제공해 두면서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것

은 사람을 우롱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이익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민간사업에 이양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무연탄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파면 파는 만큼의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해군의 수요를 충당시키고, 그 밖의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민간기업과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구보 쓰유(久保通猷) 의원

수요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수요를 필요로 하는 곳이 해군성이기 때문에 민간에 이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관청만 상대로 하고 있는 민업(民業)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민간이 경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이 94만 있으면 자본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2,30만 원이 있으면 물론 경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30만 원의 자본으로 15만 원의 이익이 있다고 하면 년 5할에 해당됩니다. 민간사업으로서 수지가 맞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평양광업소에 쏟아 부은 자본은 30만원이 아닙니다. 백 몇 십만 원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구보 쓰유(久保通猷) 의원

정부가 경영하면 언제나 그런 식입니다. 관료들이 하는 장사는 결코 수지가 맞는 법이 없습니다. 전매사업이라면 다른 이야기겠지만, 대만의 아리산(阿理山)이나 평양의 광업소는 당연히 수지가 맞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수지가 맞지 않는 일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양의 무연탄을 채굴하지 않으면 조선개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또 해군이 연탄 때문에 곤란하다면, 해군은 이해관계상 어떠한 방침이라도 취할 것입니다. 무엇을 고생하면서 정부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전 조선의 자본이 윤택하지 않을 때 또는 조선에서 모험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정부 스스로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라면 몰라도 지금은 정부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민간에 불하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총리대신도 관업은 일반 민업에 옮겨도 좋다, 적당한 곳만 있으면 불하해도 좋으나 적당한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까지 명언하고 계십니다. 조선총독부라고 하더라도 제국정부 아래에 있는 이상은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삼 저는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업의 성질을 감안하여 현재 민간의 여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알맞게 고려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노시타 시게타로(木下成太郎) 의원

예산을 심의할 때 먼저 조선의 삼림 및 광산 그 밖의 모든 토지의 면적 등 조선의 부원(富源)을 조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가까운 장래에 조선 자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상 더욱 그럴 필요가 있으니 조속히 교부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삼림, 광산 등에 관한 자료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기노시타 시게타로(木下成太郎) 의원

그렇습니다. 부원 조사입니다. 조선의 이원(利源)조사라고 할까요?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되어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기노시타 시게타로(木下成太郎) 의원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시다면 한부 복사해 주십시오. 면적, 인구, 그 밖의 모든 부원에 관한…….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다행히 최근에 작성된 통계가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배포하겠습니다.

○기노시타 시게타로(木下成太郎)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모에다 우메지로(友枝梅次郎) 의원

저도 평양광업소는 조속히 민간에 이양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만, 결산을 보면 정부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을 무리해서 탄산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큼 해군에서 무연탄을 비싸게 판매하지 않으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단가치고는 너무 높고, 관업으로 하고부터 수지가 맞지 않은데, 그것을 수지가 맞지 않는다면 공격을 받으니까 강제로 수지가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굳이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속히 그와 같은 일을 조사해서서 민업에 이양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당국에 주의 드리는 바입니다.

○가나오 료곤(金尾稷巖) 의원

총리대신이 출석하시기 전에 두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선의 제염(製鹽)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선에서는 관업으로 제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또 염세(鹽稅)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서 개인 제염업자에게 세를 걷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개인에게 염세를 걷고, 다른 한편에서는 관업이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금 전매는 전매라서 괜찮지만, 전매가 아닌 쪽도 세금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자는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제염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장래에 모든 소금을 전매로 한다는 생각이요 지금은 잠시 어쩔 수 없어서 개인에게도 제염을 허가하고 있는데, 장래는 모두 전매로 하려는 방침입니까?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가나오 의원의 지금 조선 제염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에서 소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조선 구래의 방식에 의해 제염을 하고 있는 것, 즉 내지와 거의 마찬

가지로 퍼서 구운 소금, 이것에 약간의 세금을 예전부터 걷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천일제염, 이것은 가격이 근저부터 다릅니다. 한쪽은 백 근에 50전 정도이고, 다른 한쪽은 1원 30전 정도로…

○가나오 료곤(金尾稷巖) 의원

어느 쪽이 비쌉니까?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천일염이 싸기 때문에 양자는 일절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래 소금 제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셨는데, 조선총독부는 점차 천일제염으로 해서 조선의 재정 - 재원의 하나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선에는 지금 1억 근에 가까운 외국 수입소금이 있습니다. 조선과 내지에서 천일염을 만들고, 외국의 수입소금을 저지할 계획입니다.

○가나오 료곤(金尾稷巖) 의원

그렇다면 조선에서는 점차 소금 전매를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전매에 대해서는 점차 관영으로 천일제염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조선에 전매를 실시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외국과의 관계상 곤란합니다.

○가나오 료곤(金尾稷巖) 의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선 증세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대략 들었습니다. 조선의 지조는 종래 매우 낮습니다. 물론 조선정부 시절은 말씀하신 대로 당시의 제실도 거두고 여러 모로 2중으로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는 그러한 일이 없고, 일본 영토가 된 이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어져 지조는 가장 저렴합니다. -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농사 개발은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지조를 증징하면 종래의 세금에 비해 4할이나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지조가 낮아도 조선에 가서 일본인이 토지를 가지고 경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이 많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익을 앞으로 적게 하면 그 만큼 조선의 농사 발전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십니까? 만약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시라면 먼저 지금까지 조선 농사 발전의 경과를 일목요연하게 만든 표라도 있다면 보고 싶습니다. 또 척식회사 등 지금까지의 실적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도 표가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조를 무겁게 하더라도 농사 발전에 방해가 없다는 견해인지 아닌지 들었으면 합니다.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가나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변하면 지금 질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소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조선의 지조는 종래 일본의 지조에 비하면 1 단보에 약 33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은 원래 물납입니다. 즉 쌀로 납부합니다. 쌀을 화폐로 환산한 당시의 비율은 1석에 6원 정도로 벼로 치면 반액인 3원 정도이거나 더 싸입니다. 병합 당시와 비교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벼가 약 3원 50전 정도입니다. 병합 후에 조선에

철도가 부설되고, 도로도 약 2천 몇 백리 정도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운반이 매우 편리하게 되어 곡물 가격이 평균적으로 매우 올랐습니다. 게다가 2년 전에 수출세를 폐지하였습니다. 이것이 1석 당 50전 - 1석에 10원이라고 가정하면 50전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출세를 폐지함과 동시에 그 때부터 수출세액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 쌀이 등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일본의 수입세가 폐지되고 나서 역시 수입세의 - 1석 당 2원의 수입세가 폐지되었을 때 그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미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의 미가가 약 16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과 비교하면 약 배가 되어서 지조는 1 단보 당 33전입니다. 일본의 지조는 1단보 1원 66전 정도 됩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조선에서 어느 정도 증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개발에 방해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증세로 인해 한편에서 도로라든지 다른 식산 상에 유리한 시설을 해 가는 것이므로 그 쪽이 오히려 전체를 위해 이익이 되고, 이 정도를 했다고 해서 개발을 방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나오 료곤(金尾稷巖)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농사발전 경과 등은 표라도 있습니까? 또 척식회사의 효과, 이런 표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조사한 것이 있으니 드리겠습니다.

○사쿠라이 군노스케(柵瀬軍之佐) 의원

예산에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신영토의 통치방침에 관계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조선에서는 호적법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쿠라이 군노스케(柵瀬軍之佐) 의원

이것은 제도의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이나 대만에 가보면 호적법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 식민지인과 모국인 사이의 결혼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즉 정당한 결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사생아입니다. 지금 제국이 신영토를 보유해 모두 동화를 도모하는데, 양자의 관계를 밀접히 하는 데 있어 결혼을 장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가령 외국인과의 결혼하여도 결혼이라는 것은 국제법규 관계에서 유효합니다. 그런데 신영토민과의 결혼이 무효라는 것은 통치상의 일대 결함입니다. 어떤 방법에 의해 결혼은 성립하는 것입니까?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호적법은 조선당국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 자세한 것은 사법성의 사람에게 문의하시면 아실 테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호적법이 없기 때문에 일본인과 조선인이 결혼해도 일본인의 호적 안에는 들어가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부부가 있고 남편은 일본인이며 부인이 조선인이라고 할 때, 양쪽의 籍을 가진 자가 분명히 인정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쿠라이 군노스케(柵瀬軍之佐) 의원

양쪽의 籍은 어떤 것입니까? 조선인의 호적에 들어갑니까?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인이 조선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면 일본인 호적에 들어가지 않는데, 조선인 아무개를 부인으로 삼았다고, 그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법성에 물으시면 잘 아실 겁니다.

○사쿠라이 군노스케(柵瀬軍之佐) 의원

조선에 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양자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사생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민을 장려하여 계속 모국인이 가는 때에 동화상의 관계에서 결혼이 물론 앞으로 빈번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형식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정책상 심한 모순에 빠지므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단지 조선만이 아니라 대만에서도 발생합니다. 무슨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사(우에바 하카루, 植場平)

아라이 의원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쿠라이 군노스케(柵瀬軍之佐) 의원

그렇다면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하마모토 요시아키(浜本義顕) 의원

저는 조선의 시정방침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총리대신의 임석을 요구한다고 하니 나중에 듣겠습니다. 먼저 인천의 항만 쇄암(碎岩)비가 있습니다. 전체 인천의 항만에 3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우선회사(郵船會社)의 선장도, 상관 회사의 선장 등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낙차와 간조와 만조 사이에 1장 4척이나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항만을 설비한 것이, 결국 거액의 돈을 쓰고 만들어 낸 것인데, 2천 톤에서 2천 5백 톤, 3천 톤이 되면 들어오지 못하는 등 많은 곤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병합한다든지 그 준비를 한다거나 할 때에 이 300만 원의 금액을 투자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그 항만이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회사, 상선회사 선장들이 말하기를 조선당국은 인천에 물고기를 잡는 항만을 설치하고 있다, 혹은 연못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잠깐의 좌담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이후 2천 톤이나 3천 톤 배가 그것도 장시간 정박할 수 없는 항만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쇄암(碎岩)비가 4년 계획으로 43만 얼마가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18만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선당국은 하실 계획입니까? 바위를 깨는데 거액의 돈을 버리고, 게다가 바위를 깨도 효과가 없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선당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인천축항에 대해서 하마모토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천축항은 지금 공사 중이고 낙성은 아직입니다. 1917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천축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갑문식 축항입니다. 지금 하마모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매우 낙차가 커서 약 34척의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축항으로는 효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갑문식 계획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될 때에는 4천 5백 톤 배 3척이 관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관문에 들어올 때까지의 물길을 준설해서 배를 유도합니다만, 준설하고 있는 길에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바위를 제거하지 않으면 완전한 항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인천 쇄암비를 편성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것을 4년에 걸쳐 제거해 항로를 완전히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완성되어도 효과가 없다고 하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사 중이라 완성되지 않았어도 인천에 축항하는 것은 우선회사와 기타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조사해서 결국 갑문식 항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갑문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갑문식이 완성되면 4천 5백 톤 배 3척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갑문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물길을 준설했습니다. 준설한 곳에는 2천 톤 정도의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좁은 구역이기 때문에 많은 배는 못 들어오지만 흡수(吸水)가 얇은 배는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갑문이 완성되면 그 만큼 효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하마모토 요시아키(浜本義顯) 의원

지금 답변이 있었지만, 우리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3천 톤 이상의 배는 들어오지 못하고, 특히 장시간 정박하는 것이 조류로 곤란하다, 인천의 인민을 구호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면 준설비라든가 뭐든가 매년 2만, 3만의 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선총독부가 하고 있는 일은 완전한 항구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4천 5백 톤 배 3척은 갑문식으로 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점은 충분히 기술자의 조사를 마친 것입니까? 이 점 확인해 두고 싶습니다.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이것은 기술자뿐만 아니라 영업자의 의견도 듣고 면밀한 조사를 마친 결과입니다.

○하마모토 요시아키(浜本義顯)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구보 의원도 질문했는데, 평양광업소를 관영으로 하는 것은 소자본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답변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당국은 이 광업이 무연탄이므로 이전과 달리 민업으로 이양하면 판로가 없다며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관업이기 때문에, 즉 관청식이기 때문에 채굴비 그 밖의 광업 조사비 등도 민간사업과 비교해 보면 매우 쓸데없는 비용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용을 정리하면 총독부가 관업으로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역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질문해 둡니다. 작년 2만 7천 원의 광상(鑛床)조사비가 올해 예산에는 17만 5천 5백원이 되었습니다만, 17만 2천 5백 5원이라는 광상조사비는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면밀히 묻겠습니다.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구 한국시대 한국 제철이 가지고 있던 유치(留置) 광산 26개가 지방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채굴을 허가하지 않고 유치했습니다. 그 가운데 3개소를 내년부터 조사해서 과연 그것이 유망한 광산이라면…….

○하마모토 요시아키(浜本義顯) 의원

그 광산은 무엇입니까?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이것이 과연 유망하다면 국익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조사해서 확인하기 위해 조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하마모토 요시아키(浜本義顯) 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해 두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유치한 금산(金山) 십 몇 개소를 올해 조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광상을 조사하는데 거액의 돈을 투자해도 그 광업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이것은 26개소 가운데 내년에 조사하는 것이 3개소입니다. 조사 결과, 이 광산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관에서 채굴할지, 혹은 민간에 착수시킬지, 지금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마모토 요시아키(浜本義顯) 의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모국에서는 그러한 광업에 매우 재원이 없어 곤란해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하면 미쓰이(三井)나 고가(古河)가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조사하여 재원 결핍으로 곤란한 경우, 다시 말해 광업상의 업무는 되도록 민간이 하기를 희망합니다. 총리대신도 총회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양해도 좋다고 명언하고 계십니다. 광상(鑛床)을 조사한다는 것은 돈은 15만 얼마이겠지만, 조사한 뒤에 민간에 옮겨서 특허료를 부과든지 혹은 대여료를 부과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정부가 해도 좋다는 이야기인데, 희망하는 자는 즉 큰돈을 들여서 광상을 조사할 것이므로 꼭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앞서 말씀드린 논의입니다만, 정부가 하실 계획입니까? 조선에서는 광상이 좋아도 한다는 의사가 없습니까?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어떻든 채굴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관영으로 할지 특허료나 그 밖의 것을 징수해서 민간에 청부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미타니 노리히데(三谷軌秀) 의원

총리대신은 오셨습니까?

○주사(우에바 하카루, 植場平)

나오셨을 것입니다.

○미타니 노리히데(三谷軌秀) 의원

나오셨다면 총리대신이 오시고 난 다음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부위원께 묻고 싶습니다. 조선총독부 특별예산의 대체를 관찰하면 일반회계의 보조비 금액 3백여만 원을 증세해서 삭감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재정 정리, 즉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물품을 절약한다는 내각의 방침에 따라 총독부가 행정정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독부에서 실시한 행정정리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까? 또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일례로서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조선의 재직하고 있는 자에 대한 가봉, 숙사료 혹은 특별한 것은 지금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더 이상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러일전쟁 후 매우 물가가 높아져서 조선에 가는 사람들에게 특별 가봉이 필요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선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들으면 물가도 일본보다 저렴하고 생활비도 일본보다 저렴해서 교통, 기후, 풍토상으로 조선근무자에게 지금 일반적으로 가봉을 지급하고 숙사료를 건네는 것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것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역시 존치시켜야 한다, 또 존치한다면 장래 어느 정도 존치할 생각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치상의 방침, 그리고 실행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지금 미타니 의원의 질문은 조선총독부는 335만 원의 보충금을 줄였지만, 아무런 정리의 내실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조선총독부는 지금까지 매우 노력해서 정리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3백여만 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병합 당시에는 천 몇 백 명을 파면하고 일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출세를 철폐하였고, 그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제2단계로 48만 원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번 보충금을 줄인 만큼 정리하여, 전후 합쳐서 약 350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극단적인 정리는 하지 않고, 기관의 축소가 가능할 때까지는 정리하였습니다. 이후라도 정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정리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서도 郡 통폐합을 시행해서 약 100개소의 군을 통폐합해서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국비와는 관계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도 1,000여 개를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총독부에서는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할 작정입니다. 앞으로도 여지를 찾으면 결코 정리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을 증가시킨 것은 거의 모두 사업비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정비(政費)는 힘써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봉, 숙사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시다만, 이 점에 대해서도 정리는 다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세한 표를 드러도 좋을 것입니다만, 숙사료 그 밖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에서도 가봉을 전폐한다든지, 숙사료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의견, 이에 대해서 조선 당국자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지방에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 두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분간은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몇 년 동안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타니 노리히데(三谷軌秀) 의원

총리대신에게 한마디 질문하고 싶습니다. 조선의 재정·경제상의 시설 방침 - 조선의 장래 재정, 경제상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을 취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제가 없는 동안에 질문이 있었는데 정부위원이 5년 후에 (재정)독립한다고 답변했다고 들었습니다. 재정 경제상에서 조선의 대체적인 시정 방침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내각총리대신 (아마모토 곤베에, 山本權兵衛)

지금의 미타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도 정부위원으로부터 대체적으로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부 역시 대체로는 조선총독부가 취하고 있는 재정·경제 - 장래에 영향을 주는 방침은 우선 이대로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들으셨지요.

○미타니 노리히데(三谷軌秀) 의원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정부위원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

○내각총리대신 (아마모토 곤베에, 山本權兵衛)

없다고 하신다면 이미 다년 경험을 쌓고, 조선총독부를 대표하고 있는 아라이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미타니 위원의 질문은 조선에서의 재정 경제를 장래 어떻게 할 방침인가라는 질문입니까?

○미타니 노리히데(三谷軌秀) 의원

대체의 시정방침,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대체로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아까 어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조선총독부가 지금까지 취해 온 방침은 조선의 병합 당시에는 되도록 新府의 인민에게 안도감을 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쨌든 조선 산업의 발달을 가능한 한 조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한 방침을 취해서 모든 정책에 임했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병합과 동시에 이미 조선에 11개년 간 철도를 부설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를 고쳐서 5개년 동안 부설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도로도 개량해야 했기 때문에 도로의 개량을 5개년 계속 국비로 충당하고, 더 나아가 지방비로 가능한 한 도로의 완전을 도모했습니다. 되도록 산업 시설을 도모한다는 계획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효과가 다소 나타나 조선 수이출입 무역도 작년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늘지 않았던 이출이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 밖에 금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 생산물로 무역관계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산물로서 1천만 원 있습니다. 이출한 숫자를 더하면 조선 수이출무역은 4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규모의 이출액입니다. 따라서 병합 당시보다 제반의 사업도 성과가 있었고, 식산도 점차 착수되어

점점 발달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재정 경제를 독립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원래 병합 당시부터 이 방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초에는 재정의 정리방법, 그 다음에는 모든 재정의 통일을 도모하고, 세를 늘린다거나 하는 것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 다. 이것은 조선 산업을 발달시켜 민력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조선에 적당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면 점차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의 독립을 도모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병합 당시와 비교하면 조선 이출세의 폐지에 이어 일본 이입세가 폐지되었고, 그리고 철도, 도로가 보급되어 조선의 지가(地價)가 배로 올라 조세 부담은 예전과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조세는 구한국정부시대부터 줄고 있습니다. 1908년경에 (세제)를 개정했는데, 그때까지는 금일 지세보다 약 5할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한국 남부 지방에서 1908년에 (세제)를 개정하여 5할이 줄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세금이 금일에는 줄었으므로 다소의 부담을 더해도 민간의 산업 발달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에 재정의 독립을 도모하고자 했고,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쿠라이 군노스케(柵瀬軍之佐) 의원

산업정책을 묻겠습니다. 조선에서는 면화 재배 및 첨채당(甜菜糖, 사탕무로 만든 설탕)에 대해 회사 조직 등의 계획을 시도한 사람도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다지 불만한 성적이 나타나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 것은 소위 회사령의 결과라고 비평하는 자도 있습니다. 산업장려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면화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에서도 여러 가지 장려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화는 조선총독부가 생각하는 바로는 아주 많이 진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13년의 작황이 1만 4천 정보에 달하고 있습니다. 1911년은 6천 정보였습니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기대하고 있는 목표량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장려방침을 계속하면 1917년에는 10만 정보에 달하므로 지금 예상으로는 재배 지역이 이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첨채당은 종래부터 조사했습니다. 먼저 조선 북부에서 재배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과가 나왔 습니다. 실제에 있어 이것을 재배하려면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만, 민간에서는 첨채당에 대해 상당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려는 희망자는 있습니다. 총독부도 재작년부터 계획해서 성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만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합병 해서 운영한다는 상담이 진행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총독부는 이 성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회사령에 의해 회사에 장애를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가나오 료곤(金尾稷巖) 의원

제가 총리대신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바쁘신데 장시간 계실 수도 없으니 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조선총독부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대신은 작년 행정, 재정 정리에 대해서는 열의를 가지고 진력하신 결과 올해 예산을 보면, 물론 우리들의 기대에 결코 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재정의 정리 효과는 여기까지 진력하셨다는 것이 예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과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1천 2백 몇 십만 원 이라는 보충금을 올해에 2백 몇 십만 원 줄여 천만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에는 어떤 행정정리를 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각 관청이 인원을 대폭 줄이고 봉급도 상당히 삭감하고 있습니다. 혹은 정비(廳費), 여비 등도 조금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의 예산을 보면 경상부 등에서는 조금도 행정정리 이전의 예산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원래 일본에서도 (행정정리)를 물론 해야만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조선총독부 등의 행정기관은 종래에 비해 크게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기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조선 통치 상에 조금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서는 면목을 일신한 예산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만, 조선총독부 예산은 행정정리, 재정정리 전과 지금의 예산이 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세목을 거론해서 보면 말씀드릴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세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 총리대신으로서는 일본 정부의 정리를 하셨는데, 조선총독부의 예산은 이 이상 정리할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십니까? 먼저 일본만 하고, 이어서 조선총독부 그 밖의 대만총독부 등의 정리를 하십니까, 일시적으로는 힘드니까 일본 부분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특별회계에 착수할 생각입니까? 이 이상 정리할 여지는 없다는 생각에서 대폭적인 정리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먼저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내각총리대신 (야마모토 곤베에, 山本權兵衛)

가나오 의원의 질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정부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내한 것처럼 조선총독부가 병합 이래 약 3년간 시행한 모든 사업은 서서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총독부가 예기(豫期)한 모든 계획에 대한 희망 금액보다는 점차 정부 희망에 부합하였고, 그 중 일절은 다소 감소해서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장래에 대해 조선총독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위 힘으로 행정과 그 밖의 부분에 대해 쇄신을 도모하려는 희망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아시는 바와 같이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장 일본과 똑같이 임할 수는 없는 방면이 많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행정상의 총독부 기관, 그 밖에 기관을 개선하려는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약간의 개정을 작년 이래 했는데, 그 개정의 범위 안에서 조선으로서는 상당한 개량을 시행했고, 예산상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3년간의 실적이 장래에 미치는 대체적인 영향을 신중히 숙의하고, 총독과도 교섭을 해서 성안(成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래를 위해 지금 이대로 안주할 수는 없고, 3년간의 효과에 대해 지금부터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부응해서 상당한 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모에다 우메지로(友枝梅次郎) 의원

저는 조금 전에 번 아라이 정부위원에게 질문했습니다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만 5천 원이라는 교제비를, 3만 3천 얼마라는 연회비를, 그리고 20만 원의 기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시세로서 이미 교제비 1만 5천 원을 요구한 이상, 3만 2천 원의 연회비, 20만 원의 기밀비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가 아닌지, 지금 일본 경제는 그와 같이 방대한 요구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믿고 있는데, 총리대신의 소감은 어떠신지요?

○내각총리대신 (야마모토 곤베에, 山本權兵衛)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위원이 변명하고, 그리고 다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거듭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전후 사정을 본 것이 아닙니다만, 각 성(省)의 온갖 사정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의상 정부위원이 답변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모에다 우메지로(友枝梅次郎) 의원

정부위원은 2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기밀비가 있기 때문에 아라이 정부위원은 답변할 수 없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밀비가 너무 방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사(우에바 하카루, 植場平)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번 오가와(小川) 의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었던 것에 대해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고다마(兒玉) 총무장관이 나와 계십니다. 경찰에 관계있는 사람은 지금 이쪽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총무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물어도 좋습니다. 총무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 의원

고다마는 정부위원이 아닙니다. 도쿄에는 총독도 오셨으므로, 상당한 인사가 의회에 나오셔서 설명하도록 총리대신께서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사(우에바 하카루, 植場平)

교섭하겠습니다. - 도모에다 의원의 질문이 끝나고 나서.

○도모에다 우메지로(友枝梅次郎) 의원

경무비 가운데에도 5만 얼마의 기밀비가 있습니다. 이 20만 원은 총독부 기밀비입니다. 그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회비가 3만 얼마, 지금 시세로서 그런 비용을 계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사(우에바 하카루, 植場平)

그것은 의견인 것 같군요.

○도모에다 우메지로(友枝梅次郎) 의원

총리대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요구를 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총리대신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총독부에 20만 원이라는 기밀비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총리대신 (야마모토 곤베에, 山本權兵衛)

기밀비가 많다든지 연회 문제 등은 잘 절충하셔서 조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조선에서 연회비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조선의 정부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종래의 조선이

라면 기밀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當地와 다르고, 주지하시는 대로의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밀비는 필요합니다. 이것을 조선에서도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정부도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이상은 논의를 통해서 판단에 맡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노시타 시게타로(木下成太郎) 의원

총리대신이 출석하신 김에 질문하겠습니다. 총독부 관제개혁은 어떤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또 정부위원으로서 총독이나 정무장관과 같은 책임 있는 인사가 나오지 않고 재무를 전임하는 사람이 나와서 예산을 답변하는 것은 가장 불친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무장관이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총독이 정부위원이 아닌 연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점을 질문합니다.

○내각총리대신 (야마모토 곤베에, 山本權兵衛)

첫 번째는 총독의 관제입니다만, 이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행정정리를 하는 동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식민지의 모든 관제에 대해서는 - 그러나 일본의 관제와 식민지 관제는 좀처럼 동일하게 조사를 마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최초에 세웠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독부로부터도 미리 총독에게 저의 의견을 개진하고, 총독의 의견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총독의 생각에 따라 지금은 계속 조사하여 서둘러 실행하고자 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그에 따르는 예산 등에 다소 관계가 있어 장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부 경무총장은 정무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시타 시게타로(木下成太郎) 의원

정무장관이 출석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불친절한 이유입니다.

○내각총리대신 (야마모토 곤베에, 山本權兵衛)

그다지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래의 예가 대저 그러했기 때문에 정부도 관례에 따라 인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에 출석하신 분이라면 모를까 전문적이어야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분을 출석시키는 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정부위원 수가 많습니다. 저의 희망은 가능하면 줄이려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의를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는 동안 전부 여기에 있으면 평소 사무가 지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만, 역시 많습니다. 해마다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 개의省去 안내한 대로 2명 혹은 3명, 해군성은 올해도 2명인가 3명 출석했습니다. 기타 필요한 곳은 7명이나 8명이 나온 곳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이곳에 출석하신 정부위원에게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여기에 계시는 분들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쿠라이 군노스케(柵瀬軍之佐) 의원

지금 총리대신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주사(우에바 하카루, 植場平)

지금 기노시타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했기 때문에.

○기노시타 시게타로(木下成太郎) 의원

그렇다면 조선반도에서 통치의 방침을 들으려고 하면 누구에게 질문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지금 출석한 재무부장이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합니까?

○내각총리대신(아마모토 곤베에, 山本權兵衛)

그것은 대략 가능합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상당한 인사를 출석시킬 것인데, 대체로 그 정도의 인사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노시타 시게타로(木下成太郎) 의원

만약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총독 자신이 출석해서 변명하시는 것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내각총리대신 (아마모토 곤베에, 山本權兵衛)

정부위원이 기노시타 의원의 희망에 부응할 수 없다면 정부가 그에 따라 상당한 인물을 차출하는 것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 의원

제가 처음 제출자이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취지는 기노시타 의원이 말한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질문한 뒤에 답변에 지장이 있다, 지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라이 의원도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답변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아라이 의원은 탁지부장관이고, 탁지부의 일에 대해서는 직책을 가지고 행정을 담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겠지만, 지금 헌병이라든가 경찰 문제에 대해서 시끄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총리대신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아라이 위원이 답해도 우리 예산위원이 이 답을 근거로 예산을 토의할 수 있을지, 어떨지, 지금 기노시타 의원의 질문도 그렇습니다. 조선 행정 전체에 대해서는 아라이 위원에게 질문하면 답변하시겠지요. 답변은 하시겠지만 탁지부장관의 답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중의원에서 의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대신의 말에 의하면 정부위원의 수를 줄이는 것은 우리들도 찬성입니다. 이곳에 모두 나와서 본성이 비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의 방침은 매우 찬성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육해군처럼 소수 인원으로 설명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조선은 대만이나 관동주 등과 다릅니다. 대만에서는 민정장관처럼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왔습니다. 관동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선만이 정무장관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직책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정부위원으로 하지 않고 다른 성(省)에서는 3명 내지 4명, 5명, 6명도 임명되었는데, 조선은 아라이 위원과 오야 위원뿐입니다. 부국(部局)의 사람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회에 출석해서 직무상 지장이 발생한다면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만, 현재 이곳에 와 있는 고다마 위원은 도쿄에 와 계십니다. 도쿄에 계신 이상은 바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나올 여유가 없을 리 없습니다. 이 사람은 총무국장이라 정무관이 아니지만 정부 각부의 일에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노시타 의원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데라우치 총

독이라도 나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 저의 기억에 의하면 고다마 대만총독은 정부 위원이 되신 적이 있습니다. 도쿄에 계시면 나오셨고, 실제 저희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조선에 대해서 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셔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상황,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책상 정부로서 상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답변을 근거로 의사(議事)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심술궂게 정부위원의 임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사람을 임명해서 설명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야마가타 정무장관은 조선에 계시니 어렵다고 하면 고다마 위원이라든지 어쨌든 가능한 직책 있는 사람이 출석해서 설명하지 않으시면 우리들은 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취지입니다.

○내각총리대신 (야마모토 곤베에, 山本權兵衛)

잘 알겠습니다. 다행히 나와 계시므로 어떻게든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보 쓰유(久保通猷) 의원

저는 바쁘신 가운데 총리대신의 출석을 요청한 사람인지라 가능한 한 조속히 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저번에 관제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특별한 헌병제도가 사회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혹은 개정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내각총리대신 (야마모토 곤베에, 山本權兵衛)

지금 질문의 요점은 조선의 소위 총독부 관제 개정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헌병은 조선에 현재 수천 명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경찰로 바꾸는 것은 간부와 기타의 양성이 없다면 곧바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조헌병을 순사로 채용하는 것은, 일단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있는 수천 명의 헌병을, 이를 개정하는 동시에 채용하는 것은 매우 지난하다고 생각됩니다. 총독도 아마 이 점은 잘 숙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래에 헌병 수를 얼마나 줄여서 이를 보통의, 소위 순사 쪽으로 옮긴다고 해도 그 수단방법은 조선의 장래에 대한 재정 방침과 관련지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다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개선할 때의 일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구보 쓰유(久保通猷) 의원

그렇다면 저는 이 경우에 動議를 제출합니다. 조선은 적당한 정부위원을 임명할 때까지는 이 의사를 중지하고, 다른 의사로 옮겼으면 합니다.

(“찬성, 찬성”이라고 외치는 자가 있다.)

○가나오 료곤(金尾稷巖) 의원

찬성이지만 대만에 관계되는 것은 역시 대만총독이 나오든지, 상당한 책임 있는 자가 나오지 않으면……. 역시 조선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대만은 1명으로 좋겠습니까?

○주사(우에바 하카루, 植場平)

그것은 앞과 같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로 진행시킨다면.....

○사쿠라이 군노스케(柵瀬軍之佐) 의원

앞에서 총리대신의 답변 가운데 조선의 관제를 개정하는 것에 유의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대체로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래 국민이 희망하고 있는 총독의 자격, 소위 무관을 문관까지 확장하는 것의 의견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각총리대신 (야마모토 곤베에, 山本權兵衛)

아직 성안으로 천황의 재가를 얻지 않은 것을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쿠라이 군노스케(柵瀬軍之佐) 의원

각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내각총리대신 (야마모토 곤베에, 山本權兵衛)

그것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굳이 이곳에서 그런 일개의 의견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상당한 방법을 취할 작정입니다.

○사쿠라이 군노스케(柵瀬軍之佐) 의원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선통치 방침의 실적을 보건대 거의 표리 없이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는 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수십 년 발달해 온 자치제까지 파괴해서 소위 민단제도라는 것을 철거하는 데까지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일시동인이라는 표리 없는 정치를 취하면서도, 일단 해외에 발을 들여 보면 필리핀, 자바 방면에서는 오직 조선인만이 아닙니다. 대만인도 그렇습니다. 신영토민은 제국의 국적이 있음에도 입국할 때 제국 국민으로서 동일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부민(新府民)의 인격을 인정해, 제국 국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순서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총리대신을 알고 계십니까?

○내각총리대신 (야마모토 곤베에, 山本權兵衛)

그런 일은 상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조선총독에 맡겨서 장래 총독이 충분히 그 방법에 대해 공구해서 방침을 확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쿠라이 군노스케(柵瀬軍之佐) 의원

부디 이 일은 제국민족의 발전에 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무성이 주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때 기민한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사바 시즈카(淺羽靖) 의원

문겠습니다만, 조선에서는 360만 원의 대금을 사용해서 매년 토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의 근본은 인구와 국토에 있습니다. 토지는 360만 원의 대금을 써서 조사하고 있지만, 호적에 대해서는 아직 없다는 것은 정치 근본의 일치를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호적의 근본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내각총리대신 (아마모토 곤베에, 山本權兵衛)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부위원이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저번에 질문이 있어서 일단 답변했습니다만, 호적법을 조속히 조사한 후 호적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가나오 료곤(金尾稷巖) 의원

조금 전에 조선 문제는 각 부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중지하기로 동의를 내서 모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주사(우에바 하카루, 植場平)

총리대신에게 질문하는 건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가나오 료곤(金尾稷巖) 의원

그런데 총리대신은 전혀 답이 없습니다.

○주사(우에바 하카루, 植場平)

총리대신을 대신해서 정부위원이 변명하고 있습니다.

○아사바 시즈카(淺羽靖) 의원

또 질문하겠습니다만…….

○주사(우에바 하카루, 植場平)

총리대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외치는 자 있다)

○주사(우에바 하카루, 植場平)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휴식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1분 산회.